

민주, 일 오염수 방류에 “제2태평양전쟁” “환경재앙” 총공세

이재명 “오염수 테러 규탄…모든 피해 일 책임” 박광온 “반인류적 결정에 역사 책임 따를 것”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비판하면서 ‘제2 태평양 전쟁’, ‘환경 재앙’이라는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또 정부·여당에도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면서 총공세를 벌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는 반복된다더니 일본 핵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제국주의 침략 전쟁으로 주변국 생존권을 위협했던 일본이 핵 오염수 방류로 대한민국과 태평양 연안국들에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오염수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향후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발생할 모든 피해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준다”고 강조했다.

했다.

또한 총력 투쟁을 예고하면서 “오늘 저녁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주말 장외투쟁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정부가 일본 측에 지난 8월 오염수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조기 방류를 정부여당이 요청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며 “이를 보면 내년 총선쯤 가서 검사해 보니 ‘오염 물질이 없다. 그러나 안전하다’고 말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데 제 예언이 틀리길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 재앙을 가져올 반환경적·반인류적 결정에 역사의 책임이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비판

했다.

정부여당을 겨냥해서는 “국무조정실은 일본 정부 해양 투기 결정에 대해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다면서 해양투기에 지지하거나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며 “국민들은 이 말을 듣고 허탈하다. 앞뒤가 다른 이런 입장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과연 맞나”라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께 명확한 입장과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뜻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지도부 소속 의원들도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전 국민 절대다수가 방류를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 일본에서도 반대 물결이 거세지고 있는데 한국 대통령은 찬성인지 반대인지 가타부타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며 “왜 반대한다고 말하지 못하나”라고 꼬집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핵 오



염수 해양투기 공범이다. 해양 투기를 수수 방관하는 것을 넘어 사실상 옹호하기 때문”이라며 “일본이 해양 투기를 결정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브리핑을 열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맞장구쳤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일본의 국익을 우선한 명백한 국민 배신 행각”이라고 비난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길을 터준 윤석열 정권, 총선을 앞두고 좀 더 일찍 방류하면 안 되겠냐라고 비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한다”며 “여기에 북고장구 친 국민의힘 모두 다 국민이 제대로 심판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선욱기자

이재명 “기본소득, 현실 문제 해결할 정책적 대안”

“민주당, ‘기본소득 2050 비전 연구’…곧 완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기본소득은 이제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당한 정책적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제22차 기본소득 지구네트

워크 대회 개막식에서 “대한민국 기본소득의 대표 주자라고 자부하는 이재명이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생산능력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최소한의 삶

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그런 사회도 결코 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청년배당, 아동수당, 최근 햇별연금, 그리고 재난지원금과 같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기본소득의 이념을 가진 정책들을 시행해 왔다”고 전했다.

또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기적을 이뤄냈지만, 단기간에 이룬 성장이 이면에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며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 한국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 자리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며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새로운 시대에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인간다운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올 초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지는 ‘기본소득 2050비전’을 연구해왔다”며 “곧 그 청사진이 완성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오유나기자

이재명, 잇단 노동자 사고에 “2인 1조 작업 법률로 제도화”

“국민 생명 지키는 데 여야 따로 없어…동참 부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최근 잇단 노동자 사망 사고 대응과 관련해 “2인 1조 작업을 법률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의역·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평택 제빵공장 끼임 사망 사고 등 흉물 위험한 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어이없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

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도 식품기업 SPC에서 또 다시 50대 여성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참혹한 죽음을 맞고 말았다”며 “그동안 규정이나 권고사항으로만 인식돼 2인 1조를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 현장이 위태롭게 방치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정호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당 차원에서 입법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김 의원이 위험한 작업의 경우 2인 1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민주당은 가장 열악한 일터에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2인 1조 작업을 법률로 제도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부여당도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안에 적극 동참해 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슬비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능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